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송관철*, 이의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Kwan-Cheol Song(kcsong@korea.ac.kr)*, Yi-Ran Li(liyiran8986@naver.com)**

요약

이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국제적인 CSR 핵심가치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CSR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론적으로 한국의 CSR체계나 기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글로벌 기준과 비교하여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아직도 사회공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기업들의 CSR활동은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등 기업 내·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안정적인 CSR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도 사회적 책임이 검증된 기업과의 거래를 기본으로 수행하고 있어, 원청과 1차 하청기업, 다시 1차하청기업과 2차 하청기업간의 관계 모두에서 CSR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CSR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CSR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유인하기 때문에 기업의 CSR활동이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CSR 방향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 | 사회적 책임 | 가치사슬 | 사회적 책임 지표 |

Abstract

This study is primarily aimed at conducting conceptual research that reinforc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gives direction to how local firms' CSRs should evolve in line with global CSR core values. To this end, a comprehensive approach was made to the Korean CSR system or standards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was derived by comparing them with global standards. While th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are still focused on social contribution, CSR activities of global companies take social responsibility not only in various business areas but also in the circumstance surrounding companies, labor, environment and others. In particular, they are conducting stable CSR activities within the value chain of companies. Moreover, the CSR function is required in both the original and the primary sub-contractors and the secondary sub-contractors. This can confirm that the CSR activities of companie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as they attract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a better living environment based on the CSR. Therefore, the CSR direction presented by the study is meaningful and worthwhile in that it can contribute not only to Korean companies' global advancement but also to transform our society into a better society.

■ keyword : | CSR | Social Responsibility | Value Chain | CSR Index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가 빚어낸 양적인 팽창에 대한 폐해를 전 세계가 공감하기 시작했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요소에 대하여 심각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도 빈곤의 종식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삼기 시작한지도 3년이 지나고 있으나, 상위 1%가 하위 99%를 지배하는 세상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경제 불평등 현상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상위 1%가 하위 99%보다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소득 하위 50%의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의 수를 측정한 Forbes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88명에서 2015년 62명으로, 다시 2016년 말 기준으로 8명으로 줄어드는 등 부의 편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1][2].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궁극에는 경제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의 양극화는 단순히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을 소비해야 할 소비자계층의 붕괴로 인한 생태계의 잠식으로 붕괴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세계경제포럼이나 세계은행 등 각종 경제전문가 집단이 양극화 해소방안을 찾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에서는 소득하위계층인 BoP(Bottom of Pyrami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그들을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보다는 1970년대 사회공헌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70-80년대 빠른 사업화 속에서 기업들이 창출한 눈부신 성과의 일부를 사회공헌 자금으로 출자해 온 관행을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책임은 비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오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는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상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 확대, 국가를 넘는 기업 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시대가 보편화되는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환경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CSR방향설계, CSR기준체계 확립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을 살펴본 후,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본질을 재검토하여 사회적 책임의 방향성 확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발전방향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흐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표출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수적인 일’로 인식함에 따라 경기불황이나 경영자의 인식 등에 따라 사회적 책임 범위나 규모, 더 나아가 이행여부까지도 흔들려왔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콘텐츠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인증제도인 ISO26000, SA8000 등뿐만 아니라 SEDEX, BCSI 등 협회차원에서 조사·발간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CSR의 개념과 특징

1. CSR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CSR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Bowen[3]은 CSR을 '사회의 목적과 가치에 적합한 정책을 추구하고 결정하며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기업가의 의무'로 정의하였다[3]. 이는 CSR을 구상하고 실현해야 할 주체를 기업가로 한정함에 따라 전문경영인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업의 CSR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1970년대부터 CSR은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데[4-6], 이는 기업가 정신보다는 최종적인 정책 활동, 즉 결과와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CSR활동을 이윤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으로 변화시켰으며, 최근 많은 선행연구자를 통해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이윤도 많이 창출한다는 CSR과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다[7-10].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CSR의 시각은 '사회공헌'이라는 미명하에 기업과 사회의 이원화된 구조, 즉 기업이 사회에 제공하는 혜택으로서 접근해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CSR이 '공헌(Contribution)'이 아니라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업과 사회를 동일시하는 시각에서 Coleman[11]은 CSR을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11]. 이는 생산과 소비의 모든 기업경제의 흐름 속에서 기업의 이익이 단지 주주(Shareholder)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이나 기업 모두를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기업적 차원에서 책임을 부가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의 가치를 향상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CSR을 결과론적 차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불공정거래, 마약·밀수 등을 통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이윤창출 등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사회공헌은 잘 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통합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최근의 CSR관점에서는 얼마 전 가슴기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를 유발한 옥시, 배출가스기준을 조작한 폭스바겐 등이 아무리 사회공헌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CSR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CSR을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결과나 기업차원에서의 성과의 시각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내재적 가치, 즉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신호를 발생시킨다.

2. CSR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Hart[7], Kanter[8], Kotler & Lee[9] 등 다양한 선행연구자를 통해서 CSR이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2004년~2010년까지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전인수 외[1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지수가 높은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업가치가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유사한 범위를 연구한 반혜정[13]은 사회적 책임활동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성과가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전운수 외[14]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적 책임활동은 조세회피를 억제하거나 정보투명성이나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5-18].

3. 최근 CSR의 동향

Coleman[11] 등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연계된 행동들을 경영환경 내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CSR활동이 기업의 Value Chain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CSR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CSR은 과거의 '착한 기업'과 같

은 단순 이미지 메이킹을 벗어나 생산과 운영과정에서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영공시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 보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의 생산과정, 즉 1차·2차 거래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점검하여 재화가 생산단계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일반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보편적인 도덕 기준, 그리고 근로자,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참여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추세다.

III. 해외 CSR의 동향

1. GRI[19]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기업이 환경과 사회 문제의 책임 이행에 대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이면서 해당 지속가능보고서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 NGO인 '환경을 책임지는 경제를 위한 연합' 세리즈(Ceres)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2017년 기준 글로벌 250대 기업 중 74%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90%이상의 대기업이 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GRI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보고서 기준은 2000년 G1, 2002년 G2, 2006년 G3 등 3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가장 최근 발표한 GRI G4 Index는 2014년 발표이후 2016년에 일부 개선하였다. 이는 General Standard Disclosures와 Specific Standard Disclosures로 구분되는데, GRI Standard는 모듈화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적용가능한 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할 수 있다.

GRI General Standard에서 노동조합비율(G4-11),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이니셔티브(G4-15), 조직 내 중요한 이슈를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G4-20 및 G4-21), 이해관계자의 참여(G4-24~27), 기업의 윤리성(G4-56)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영역을 관리하는 등 일반적인 CSR활동에서 노조, 윤리 및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중시하고 있다. GRI Specific Standard는 특히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회문제에서도 노동이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기업의 CSR활동이 노동·인권 및 환경 등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게다가 반부패, 독점, 고객보호 등 사회 일반의 영역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루고 있다.

2. UNGC[20]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상향시키고자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자발적으로 협약한 협회조직이다. UNGC에 가입한 기업은 세계적 원칙에 기반을 둔 기업전략 및 사회신념을 통해 세계 경제와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정당하며 포괄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하도록 기여한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착취, 부패,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 등 심각한 딜레마를 상호 연대하여 극복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UNGC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10대 기준(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을 중심으로 23개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중요시하는 UNGC의 가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기업은 UNGC Index를 가치사슬(Value Chain)에 포함시켜 상시적인 경영활동 내에서 수행해야 하며, 기업 내부의 인권이나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준수와 의지, 그리고 반부패를 통해 거래관계에서의 투명성제고 등에 대한 활동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3. ISO26000[21]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년 발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이는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 의사결정 및 활동 등을 할 때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NGO) 등 7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7대 의제를 사회적 책임 이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 등을 담고 있다.

ISO26000은 조직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발전과 참여 등 7가지 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ISO26000은 기업의 CSR 영역에 대하여 노동, 인권 및 환경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소비자, 거래처를 고려하는 활동을 중시하고,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GRI나 UNGC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포함한 공정운영 등에 대한 사항과 소비자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다. 게다가 기존 고용의 영역으로 다루어 차별이나 근로에서의 기본원칙을 인권의 영역으로 다루면서, 보다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ISO는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와 공유하고 교육·문화·보건에 대한 투자와 기타 사회적 투자를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4. EICC[22]

EICC는 IBM, HP, Dell 등 8개 글로벌 전자 관련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행동규범, 노동, 건강과 안전, 환경, 경영시스템, 기업윤리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가치를 명시한 기준이다.

EICC는 노동 7항목, 안전보건 8항목, 환경 8항목, 경영시스템 13항목, 기업윤리 8항목 등 5가지 기준에 대하여 44개 세부항목을 표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EICC는 노동 영역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GRI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자발적 근로와 연소근로자 노동 제한, 근로시간 및 복리후생의 보장 등 인권과 노동의 차원을 노동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EICC는 특히 안전보건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재해와 질병', '산업안전', '산업위생', '기계 안전 보호 장치'뿐만 아니라 육체적 과중업무를 지양하는 등 다른 지표보다 산업안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기업윤리 영역에서 부당이익 금지를 통해 부패방지를 넘어서 투명사회 구현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경영시스템에서 협력사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1차, 2차 벤더로 이어지는 기업간의 거래 생태계에서의 CSR Value Chain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있다.

5. BSCI[23]

BSCI(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무역과 관계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1,500개 이상의 소매상, 수입업체 등으로 결성된 협회(FTA; Foreign Trade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사회적 규정이다. BSCI는 인증시스템이나 감사시스템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행(Compliance)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시하는 제도다. BSCI가 추구하는 가치는 기업의 생산·소비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계망을 견고히 하고, 특히 생산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기업에 책무에 포함시켜 이를 준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BSCI의 기준은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UNGC(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에서 제시하는 국제적인 노동과 인권의 표준을 준수하고 있어 검토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기준을 준수한다면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의 SA8000인증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BSCI는 국제무역관계 속에서 해당 국가의 개별법(국내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근로환경에 대하여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준수

하기 위해 추진된다. BSCI는 기업이 법적 준수, 근무시간, 상여, 아동노동금지, 강제노동금지 및 징계조치, 집회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시스템, 환경 및 안전문제 등 11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고 있다.

6. SA8000[24]

SA8000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합하여 97년에 설립된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에서 수립한 지표로 조직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작업장 내에서 수용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A8000은 작업장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에서 중요한 8가지 영역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한다. 이는 기업의 이윤창출에 대한 비즈니스 가치를 존중하면서 공급망 사슬(Supply Chain)에서 사회적 규정을 제시하여 경영진들의 수용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A8000은 인증시스템으로 인증서 발급 후 3년간 유효하며, 매 6개월 간격으로 사후관리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7.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RI Index, UNGC, ISO26000, EICC, BSCI, SA8000 등 기업의 CSR에 대한 해외의 기준은 인증제도 및 Guide Line제시 등의 형태로 강조되고 있다. 인증제도의 경우 Index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GRI, BSCI 등 Guide Line을 제시하는 경우는 자체 점검보고서에 대한 제3자 시각에서의 검증 등을 통해서 기업의 CSR활동을 측정하고 있다.

다양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CSR이 공통적으로는 노동, 인권, 환경 등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지표에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공급망 사슬(Supply Chain), 즉 기업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 관계, 그리고 소비자나 지역사회 및 상생의 관점에서도 CSR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

표 1. 해외CSR Index 비교

구분	GRI	UNGC	ISO26000	EICC	BSCI	SA8000
노동/인권	✓	✓	✓	✓	✓	✓
환경	✓	✓	✓	✓	✓	
윤리/공정	✓	✓	✓	✓	✓	
안전보건	✓		✓	✓	✓	✓
지역사회	✓		✓			
상생	✓		✓			
이해관계자참여	✓	✓	✓			
소비자	✓		✓			
지배구조	✓	✓	✓			

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는 CSR활동이 기업의 Business Value Chain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CSR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글로벌 기업경영활동의 트렌드는 국경의 구분 없이 기업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FTA 등을 통해서 기존의 무역장벽으로 제한할 수 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그 중 기업의 IS26000과 같은 인증제도, 그리고 BRI, BSCI 등의 검증 등의 방식으로 기업 간 거래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CSR활동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니즈가 거래의 성사나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들도 기업의 CSR활동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 그리고 정보공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증진과정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CSR이 Business 영역에서 중요하게 부각에 따라 기업의 CSR의 성과는 단지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거래량 확충, 판로개척 등의 활동을 통한 이윤극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CSR이 기업이 추구하는 주주의 이익극대화화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외에서 CSR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확립되어 이에 대한 인증제도나 검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가의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국제기준 외에도 자국 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걸맞은 지표나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에서도 국내의 사회변화에 맞춰 CSR에 대한 방향성을 재

조명하고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IV. 한국의 CSR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CSR은 크게 기업 내부와 기업 외부의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 내부는 다시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기업 외부는 정부,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소비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내부적 시각에서 재계, 즉 기업 경영자의 시각에서 CSR은 아직 전통적인 활동 즉 사회공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 ISO26000, 지속가능보고서 등 다양한 인증이나 리포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글로벌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대기업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오히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재계의 대외활동의 중심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CSR활동을 사실상 사회공헌백서로 갈음해오면서 기업의 CSR활동을 '사회공헌'으로 왜곡시켜왔다.

기업 내부의 또 하나의 축인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기업의 CSR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 노동계에서 강조하는 근로자의 경영참여 요구는 CSR의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환경, 차별금지, 사회생태계에서의 기업 역할 등 CSR 전반에 대한 접근이나 이에 대한 기업의 소명에 대해서는 거의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97년 IMF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2003년부터는 산업자원부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등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25]. 그 일환으로 윤리경영평가(2002년), 한국형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BSR: B.E.S.T Sustainability Report Guidelines, 2006),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표(SYSA: Self-test for Your Sustainability, 2006) 등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기업의 CSR활동을 촉구하였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률적인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

련')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제정의 실천의 일환으로 CSR을 강조해왔는데, 이는 기술혁신, 환경오염, 노사관계, 고객만족, 사회 공동체 활동, 경영전문성, 경영본업 성실성, 준법성, 재무건전성, 경제발전기여 등 10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KEJI Index를 개발하여 매년 경영공시기업을 중심으로 평가·시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CSR활동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국내 소비자들은 재화의 구매에 있어서 가격경쟁력 또는 브랜드 가치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으로서 CSR과 같은 기업의 당위적 책임에 대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기업의 갑질, 기업 오너의 횡포, 환경·노동관련 법률위반, 파업, 비자금 조성 및 불법행위 등 기업의 비위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아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시기를 회피하거나, 일자리창출, 지역발전자금 쾌척 등 주위를 환기시키는 활동으로 위기를 극복해오는 경향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CSR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태도는 기업이 CSR에 대한 활동을 부수적인 활동, 기업이윤에 반하는 '단순 지출'로 폄하하는 것을 방조시켜 국내 기업의 CSR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CSR을 수행하던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에 진입해서는 CSR활동을 등한시하는 학습효과를 유발시켜 국내 CSR생태계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군인 해외의 CSR 동향에 대한 파악 방법론을 연역적 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국내 CSR이해 관계자 그룹(재계, 노동계, 정·관계, 시민단체, 일반시민)중 노동계와 일반 시민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계와 정·관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CSR Index를 중심으로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재계 CSR Index

본 연구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FKI)

에서 발표하는 사회공헌백서를 체계 CSR Index로 놓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FKI Index는 사회공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 지표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FKI Index

분야	내용
사회공헌 지출	-전년·금년도 사회공헌 지출금액 총액 및 증감사유 -사회공헌자금 집행방식(자체or파트너십 프로그램 vs 일반기부) -사회공헌자금 중 기부금으로 처리금액 -사회공헌자금 지출 사업 분야
비금전적 사회공헌	-프로보노 활동, 시설개방, 헌물 기부, 임직원 봉사활동 (인원, 시간, 참여율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역별 구분: 지역사회, 전국, 글로벌 -이슈별 구분: 사회문제 해결, 업종 관련 이슈, 취약계층 지원 -지원형태별 구분: 하드웨어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혼합형 -사회문제 접근방식별 구분: 긴급지원, 자립촉진, 미래 자원 육성, 미래 유·무형 인프라 조성
전담부서 및 제도	-사회공헌 전담부서 유무, 인원, 사회공헌위원회 운영여부, 임직원 모금제도, 매칭 그랜트 제도 등
평가시스템	-평가시스템 유무(자체/외부), 사회공헌 평가지표(임직원 만족도, 외부 수혜자 만족도, 홍보 실적, 외부 전문가 평가, 경제적 가치 환산)
임직원 봉사	-사내 봉사자 지원제도, 자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여부, 임직원의 봉사단 운영
사회공헌 인식	-기업 사회공헌 저해요인(내부 및 외부), 사회공헌 트렌드 인식 수준, 사회공헌 성과 만족도, 사회공헌 인식제고 방안, 파트너십 선호기관, 파트너십 선정사유 및 애로사항, 파트너십 개선방향, 미래 발전전략 및 향후 사회공헌 관심분야

*출처: [26][27]

FKI Index의 특징은 사회공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CSR Index는 사회공헌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FKI Index에서는 금전적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 지원과 같은 비금전적 사회공헌 활동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위원회 등 기업 내부 전담조직과 사회공헌활동 평가시스템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임직원 모금제도, 매칭그랜트 및 인적 봉사내역(임직원 및 임직원의 봉사단 운영) 등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측정지표가 분야별로 혼재되어 있어 분류가 다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16년 발생한 국정농단사태(일명 ‘최순실 사건’)의 여파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기업이 전경련을 탈퇴

하였고, 2017년에는 전경련 내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사회협력팀, 사회공헌팀으로 구성된 사회본부를 해체(폐지)함에 따라 사회공헌백서는 2017년 말 기준 발간이 중단된 상태다.

2. 정·관계 CSR Index

정부 측면에서는 2006년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에서 공동 연구·발간한 한국형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BSR: B.E.S.T Sustainability Report Guidelines, 2006)이 사실상 대표적인 CSR Index라 할 수 있다. 이는 UNEP에서 주관하는 GRI나 ISO26000, UNGC 등 해외에서 통용되는 다국적 기업용 가이드라인을 접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을 위해서 개발된 지표로 윤리경영, 환경경영, 혁신경영, 창조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28].

BSR Index는 GRI나 ISO26000, UNGC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형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외 CSR Index의 특징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관점은 과도하게 국내 상황에 집착 시킴에 따라 원청사와 하청사의 관계에서 원청사가 하청사를 관리하는 측면만 다뤄지고 있다. 이는 실제 원청사가 하청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인 역할에 불과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원청시각에서 하청을 바라보는 단방향적 접근으로 인하여 원청과 하청의 Business Supply Chain이나 Value Chain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게 되어 국내에 CSR 생태계를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게다가 유사한 지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RI나 ISO26000 등과 같이 글로벌하게 인정받거나 통용되지 못한다는 한계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동 지표의 경우에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KoBEX의 지표 일부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한국형 Index에 보다 가까울 것이다. KoBEX에서 다루고 있는 CEO의 윤리경영의지, CEO의 부정행위, 여성관리 자비율, 장애인 및 비정규직 고용비율, 안전보건, 쟁의

행위, 내부자거래 등의 내용은 국제표준 CSR Index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한국적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3. 시민사회 CSR Index

시민사회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감시를 위해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실련의 KEJI Index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입장에서의 CSR Index를 분석하였다. KEJI Index는 기술혁신, 환경오염, 노사관계, 고객만족, 사회 공동체 활동, 경영전문성, 경영본업 성실성, 준법성, 재무건전성, 경제발전기여 등 10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실련에서 ‘좋은 기업’으로 선정하여 매년 시상(‘좋은 기업상’(舊 경제정의기업상))을 진행하고 있다. 좋은 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KEJI Index는 2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29].

KEJI Index는 앞서 다뤄본 정부의 BSR 및 KoBEX를 혼용하여 한국 사회의 프레임에 맞춘 지표로 지난 20여 년간의 검증을 통해서 지표의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표다. 다만 KEJI Index 역시 기업 자체에 초점을 두고 CSR을 평가함에 따라서 Business Value Chain 내에서 CSR과 경영활동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CSR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재계영역에서 대표적으로 FKI를, 정부측면에서는 BSR과 KoBEX를, 시민사회에서는 KEJI를 중심으로 Index가 형성되어 있다. [표 3]은 국내 Index별 주요 항목을 비교한 내용이다. 국내 CSR Index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FKI의 경우 사회 공헌활동만으로 CSR을 대변하려고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일부 사회공헌활동을 별도 체크항목으로 두지만 비준적 차원에서 국내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CSR Index에서 환경에 대한 측정이 구

표 3. 국내 CSR Index 주요 항목 비교

구분	FKI Index	BSR Index	KoBEX Index	KEJI Index
인권	인권보호	종업원 인권교육		
	인권침해 지양			
노동권보장		결사자유보장,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질병관리, 종업원 부상예방, 노동쟁의현황	안전보건(산재 등), 노사관계(노동법 위반, 쟁의행위 등)	작업장 보건 및 안전, 노사관계, 임금 및 복리후생,
노동	강제노동 배제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 철폐	아동노동금지		
고용차별 철폐		남녀임금/복리 비교, 차별관행 모니터링	인권 및 고용평등(여성 관리자, 장애인/비정규직)	고용평등 확대(여성/장애인)
	환경 예방접근	환경정책 투자	환경정책	환경개선 노력
환경	환경책임 증진	원재료 및 에너지, 환경영향	환경투자, 법규준수	환경위반 오염
	환경친화 R&D			
반부패	부패행위 척결	이해관계자 참여, 지배구조/리스크관리, 뇌물/부패관련 정책, 정당후원 기부금, 법규위반제재 현황	CEO 윤리경영 의지, CEO 솔선수범, 이사회 건전성/투명성/독립성, 뇌물/탈세/부패방지	지배구조 건전성, 투자지출의 건전성, 자본조달의 건전성, 공정성, 투명성
	소비자 보호	소비자보호, 소비자만족도, 독과점금지	소비자보호	소비자 권리보호, 소비자관련 법준수, 소비자안전
사회공헌	재무/비재무 프로그램	비재무 프로그램	재무/비재무 프로그램	재무/비재무 프로그램
상생협력		협력업체 지속가능경영, 협력업체 선정 시 사회적/환경적 요소	협력업체 거래신뢰도, 불공정거래	

체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노동이나 인권에 대한 측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차별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여성관리자, 장애인 및 비정규직 고용 비율 등 제한적인 요소로만 접근하고 있어서 고용차별에 대한 일부 항목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고용이나 인권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노동 조합에 일임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즉 인권과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기업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한 이슈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CSR Index는 글로벌 기준에 비해 미비한 현실이다. 특히 관에서 주도한 평가 Index의 경우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민간 모두에서 운영 중인 CSR Index에 대한 국내 공통점은 ‘기업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기업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SR Index는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제 기준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는 국제 기준을 준용하여 만든 BSR Index나 KoBEX를 제외한 나머지 Index에서 상생협력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마저도 원청사 시각에서 1차 하청사의 체계를 모니터링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CSR Index는 사실상 원청사 기준으로 기업 내부의 이슈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내부의 차원에서도 IV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 CSR지표는 노동권, 고용차별 등에 대하여 장애인을 제외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의 수 못지않게 중요한 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전체적인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도 측정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권에 대한 사항,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에 대한 사항들도 CSR Index 개선 시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반부패의 경우에는 CEO의 일탈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또한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갑질’의 형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과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단지 기업 내부의 CSR활동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상생협력의 방안에서 원청사가 하청사에 대한 단방향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이러한 CSR활동이 시장경제 생태계 중 기업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간 비즈니스 영역에서 CSR활동이 함께 측정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업 간 거래 시 CSR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외부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다른 기업의 일상 경영활동에 피해를 주고, 아동 노동이나 강제노동을 일삼는 기업이라면 시장경제 울타리에서 배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CSR 활동이 Business Value Chain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CSR Index에서 해외CSR Index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미비한 항목을 중심으로 [표 5]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표 4. 국내외 CSR Index 비교

구분	해외Index		국내 Index			
	GRI	ISO26000	FKI	BSR	KoBEX	KEJI
노동/인권	●	●		●	●	○
환경	●	●		●	●	●
윤리/공정	●	●		●	●	○
안전보건	●	●		●	●	○
지역사회	●	●	●	●	●	○
상생	●	●		○	○	
이해관계자참여	●	●		○		
소비자	●	●		●	○	●
지배구조	●	●		●	●	●

주: ●상대적 우수, ●상대적 보통, ●상대적 미흡, ○상대적 미비

표 5. 국내 CSR Index 발전방향

구분	문제점	Index 개선 방향
노동인권	노동권 근로자 권익 중심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에 대한 Index 추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차별철폐, 취약계층 고용률 변동증감, 근로자 인문보장
윤리/공정	오너/임원에 대한 이슈관리 미흡	기업오너/임원에 대한 윤리강화(범법, 갑질 등 사회적 이슈, 오너의 CSR활동)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반영 미흡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 정도, 기여지역과 사업장과의 관련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가치 및 임팩트
상생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성과 협력사 불안만 관리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CSR 활동 및 평가결과 반영,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사회가치에 대한 사항 반영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참여 미흡	CSR활동별 주요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국내 CSR은 우선 강제노동금지나 아동노동금지에 대한 Index를 추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불법노동자 양산과 맞물려 이들에 대한 강제노동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있으나 CSR관점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한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동의 범위를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점점 관리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복리후생 차원에서 내국인과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차원에서라도 시급한 문제이다.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률을 각종 정부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변동관리가 요구된다. 즉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사항을 기간 양적으로만 접근했다면, 이제는 질적인 수준도 관리해야 하며, 양의 변화는 질적인 수준관리를 위한 초석이 된다 하겠다. 근로자 인권에 대한 사항도 최근 조금씩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항목이다. 윤리/공정성 관련해서 국내기업은 재벌이나 오너라는 측면에서 해외기업과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오너/임원에 대한 이슈관리도 추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오너의 자발적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 오너의 CSR에 대한 활동도 점검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적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를 상생협력의 대상에 포함시켜 1차, 2차 등 공급사 전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을 고려해야 하며, 소비자나 지역사회에 전달되는 모든 사회가치에 대한 사항도 점검하고 측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CSR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사항이 매우 미흡하다고 하겠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CSR의 공급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나 수혜자 등 프로세스 전체에 관여되는 이해관계자의 합의된 방향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CSR활동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요구되는 개선사항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글로벌 CSR의 현황 및 특징을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과 인권, 윤리와 공정성, 지역사회, 상생 및 이해관계자 참여 측면에서 국내 CSR Index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적 특성에 따라 재벌이나 오너가의 과오도 CSR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게다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같은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증적용하거나 구체적인 데이터로 비교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Index의 측정 산식과 Check-List, Proxy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된 Index를 적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기업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이 우리 사회의 모든 생태계 구성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이를 생산과 소비에서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 소비자는 CSR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고, CSR을 잘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원청사는 하청사와, 1차 벤더는 2차 벤더

와, 2차 벤더는 다시 3차 벤더와 CSR을 점검하는 등 CSR활동을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관계에서도 거래 선행조건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인권과 보다 나은 고용·환경이 보장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반부패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송관철, 신은중, “작업장 민주성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리더십의 조절효과,” 산업관계연구, 제26권, 제4호, pp.81-112, 2016.
- [2] Oxfarm, “An Economy for the 99%,” Oxfarm International Press, 2017.
- [3] H. 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1593.
- [4] A. B. Carroll,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4, No.4, pp.497-505, 1979.
- [5] S. L. Wartick and P. L. Cochran, “The evolution of the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0, No.4, pp.758-769, 1985.
- [6] D. J. Wood,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6, No.4, pp.691-718, 1991.
- [7] S. L. Hart, “Beyond greening: strategies for a sustainable world,” *Harvard business review*, Vol.75, No.1, pp.66-77, 1997.
- [8] R. M. Kanter, “From spare change to real change: The social sector as beta site for business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77, pp.122-133, 1999.
- [9] P. Kotler and N. Le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oboken, 2005.
- [10] J. A. Pearce II and J. P. Doh, “The high impact of collaborative social initiatives,” *MIT Sloan Management Review*, Vol.46, No.3, pp.30-39, 2005.
- [11] J. Coleman,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12] 전인수, 설유영, 김철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 관련성,” *경영교육연구*, 제27권, pp.361-387, 2012.
- [13] 반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적 성과간 비선형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제18권, 제4호, pp.183-209, 2013.
- [14] 전용수, 이경일, 고세라, 손성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CSR 통제시스템이 사회적 책임성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8권, 제1호, pp.127-149, 2013.
- [15] 김정교, 김정호, 김경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pp.5130-5157, 2014.
- [16] 김정교, 김혜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63권, pp.115-140, 2015.
- [17] 이균봉, 최수비,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5호, pp.2105-2128, 2015.
- [18] 최미화, 조용연, “교차상장과 사회적 책임활동 및 시장반응,” *경영교육연구*, 제31권, pp.21-41, 2016.
- [19] <http://www.globalreporting.org>, 2018.07.28.
- [20] <http://www.unglobalcompact.kr>, 2018.07.28.
- [21] <http://www.iso.org>, 2018.07.28.
- [22] <http://www.eiccoalition.org>, 2018.07.28.
- [23] <http://www.bs-ci-intl.org>, 2018.07.28.
- [24] <http://www.sa-intl.org>, 2018.07.28.
- [25] 이장원, 이민동, 강영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과 노사관계에 대한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2006.
- [26]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15.

[27]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16.

[28] 국가청렴위원회, 기업 윤리경영 모델, 2007.

[29] 경실련, 제2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5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2016.

저 자 소 개

송 관 철(Kwan-Cheol Song)

정회원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공학사)
- 2005년 8월 : 고려대학교 노동복지정책학(행정학 석사)
- 2016년 8월 : 단국대학교 경영학(경영학 박사)

<관심분야> : 노사관계, 협동조합, CSR

이 의 연(Yi-Ran Li)

정회원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문학사)
- 2016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경영학 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산업 및 조직심리, 조직행동, 기업 CSR